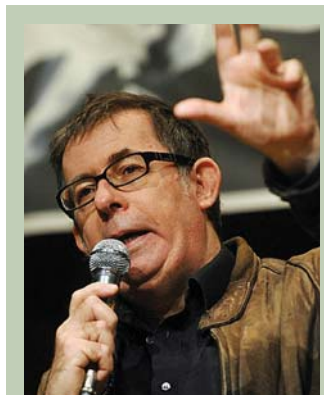




특집 :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7~10면

민주노동당의 위기
- 혁신 방향은 다원주의여야 한다
- 비대위가 할 일과 하지 말 일
4~5면



삼성이 저지른
태안 재앙과 저항
3, 16면

드러나는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3면



국제
- 케냐의 부정선거 항의 투쟁
- 아프가니스탄의 커지는 불안정
6면

존 몰리뉴 칼럼 ③
-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2~13면

맑스와 《자본론》 ①
- 상품 물신주의
11면

<맛불> 웹사이트를
http://www.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을 함몰시키려는 친북좌익정권을 퇴출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보람되고 의로운 투쟁이었다.”
- 재향군인회장 박세직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나라당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이유

“과거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것은 때로 급진적 좌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
- 통합신당 대표 손학규의 반성

“손학규 대표가 크게 보면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느냐”
-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예를 들면 진보정당도 한미FTA를 찬성할수 있다고 본다.”
- 왜 탈당하는지 알 수 없는 유시민

“노인식 부사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SDI 노동자 휴대폰’ 위치 추적을 정말 했느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색하게 시인하더라. 구조본내 임원들은 김성환 위원장을 ‘구속시켜야 하는데’라며 고민했다. 나중에 보니 정말 구속을 시키더라.”
- 김용철 변호사

“삼성 홍보팀의 경우 기자들에게 밥 사고 접대하고 그 외중에 촌지를 주기도 한다. 골프장에서 내기골프할 때 잃어주기 위한 돈을 갖고 간다. 그리고 밥먹을 때 한 50만 원씩 주는 것도 봤다.”
- 김용철 변호사

“민노당의 강령은 ... 북한이 떠드는 말 그 대로다. ... 심 위원장이 종북정당으로 국민의 버림을 받은 민노당을 구해내려면 ... 용기를 먼저 발휘해야 한다.”
- 심상정 비대위 대표에게 ‘종북주의 청산’을 충고하는 <조선일보>

이명박의 황당한 ‘발상의 전환’

이명박이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려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들의 ‘허경영스런’ 본질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이 내놔던 ‘통신요금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통화료 발·수신자 쌍방 분담’과 ‘통신요금 누진제(많이 통화할수록 통화료가 비싸지는 것)’로 나타났다. 통신업체들의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과소비”가 문제이고, 따라서 전화를 걸고 받기 부담스럽게 하면 통신요금이 자연스럽게 “인하”할 것이란 얘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다운 ‘발상의 전환’이다.

이명박식 ‘발상의 전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확대’ 공약도 이른바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약수

지분형 분양주택이란, 주택 분양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내서 입주자가 싼값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2억 짜리 집을 5

천만 원에 사는” 게 가능할 순 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집값이 매년 10퍼센트씩 뛰는 투기가 벌어져야만 한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부동산 폭등 속에 뛰어들어 내 집 마련 ‘투기’를 하라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이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윤 보호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명박은 “폐를 써서 [FTA에 반대]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된다”며 “쌀 농사를 지어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데 ... 쌀을 비싼 밀가루 대용으로 해 ... 동남아처럼 쌀국수를 먹자”는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다.

이런 이명박식 ‘발상의 전환’은 그나마 있었던 포퓰리즘 공약들이 모두 친재벌·친기업 본질을 흐리기 위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명박식 ‘발상의 전환’은 분명 대중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약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불만을 결집시켜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다.

조명훈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기꾼 이명박

인터넷까지 옥죄는 정보통신방법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사회단체들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13개 단체의 웹사이트 게시물 삭제를 명령

했고, 이를 거부한 단체들을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방법을 이용해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 등을 통신상에서 유통했을 경우 정통부장관이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

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법을 이용해 진보진영을 일상적으로 감시·사찰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정통부의 게시물 삭제 명령 공문을 5차례나 받았다고 한다.

이런 탄압은 당장에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진행되고 있지

만,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작년 8월에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을 지지하는 게시물 수십 건이 삭제됐다. 강력한 항의로 1주일만에 복구됐지만, 이것 역시 이랜드 사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방법에 근거해 삭제했던 것이다.

때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통부의 삭제 압력에 반대해야 한다.

장한빛

포스코 - 인도의 자원을 약탈하려 민중을 짓밟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해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를 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인도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 정부와 손잡고 혈값에 방대한 토지를 구매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3만여 명의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텔리 연대 그룹’과 ‘인권과 사회정의 활동가들’은 연대를 호소하는 편지를 한국에 보내왔다.(‘한국진보연대’ 게시판에 실린 ‘연대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참고하시오, <http://www.jinbocorea.org>)

포스코와 오리사 주 정부에 맞서 싸우는 현지 주민들은 한국 기업 포스코가 “우익 주 정부와 연방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정권을 이용해 인도 정책 역사상 유례없는 양해를 획득했고 이를 통해 단지 철광 채취·판매로만 무려 2백50억 달러를 벌어들일 판”이라고 폭로했다.

“포스코가 투자하는 자가싱푸르 지역에는 경제특별구역조치에 따라 토지소유권, 환경·노동 보호조항을 비롯한 다른 법률들이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된다.”(월간 <말>, 2007년 7월)

반면, 강제 이주와 자원 약탈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2년 반 동안 끔찍하게 탄압 당했다. 2006년 1월 2일에는 오리사 주 정부군이 나서서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12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포스코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한 사람들”이 시위 텐트에 폭탄을 던지며 공격했다. 그런데도 인도 경찰은 이를 방관했고, 일부 시위대를 포위한 채 식사 공급을 차단하고 벌금으로 협박했다.

지금 주민들은 “국제 자본의 힘

에 대항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포스코는 파트너를 인도 정부에서 한국 정부로 바꿨을 뿐 국내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결국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썰던 것이다.

최근 포스코는 이명박 당선 이후 건설플랜트노조 포항지부에 대한 노조비 가압류, 노조 탈퇴강요 등 무자비한 탄압에 나섰다.

2006년에도 노동자들은 한국

포스코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찰은 하중근 조합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항의하는 여성의 배를 걷어차 유산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도 모자라 포스코는 점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수십 명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

포스코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란 지난해에만 매출 22조 2천억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 돈에는 인도 민중과 한국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배어 있다.

세계적 약탈 기업 포스코는 인도와 한국 민중 공동의 적이다

장호중

살인자 삼성과 범죄 은폐 정부

삼성중공업이 저지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벌써 50여 일, 피해 지역은 지금 재앙으로 뒤덮여 있다. 태안은 물고기도 사람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됐다. 메스꺼운 기름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찌르고, 기름 덩어리들은 경기, 전남, 심지어 제주도 해안까지 떠밀려 갔다.

고래 일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고 46종의 어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 세 명이 숨졌고 ‘제4의 희생자’가 나올까 걱정일 뿐이다.

주민들은 텅 빈 쌀독을 보며 “굶어죽게 생겼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 난방도 안 되는 냉골에서 잠을 청하는 노인들이 수도룩하다.

그러나 가해자인 삼성은, 이견희가 당장 태안으로 가서 주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바위 틈의 기름때를 닦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난 한달 반 동안 항해일지까지 조작하며 범죄 은폐에만 매달렸다.

정부, 언론, 검찰은 앞다퉈 삼성을 비호했다. 정부는 초동 대처를 엉망으로 해 피해를 키웠고, 삼성 범죄 뒤치다꺼리를 모두 자원봉사자들에게 떠맡겼다. 방제작업 관리는 여전히 엉성하기 짝이 없다. 사고 열흘 후에야 편성된 지원금은 기초생계비도 안되는 쥐꼬리였지만 이조차 아직 주민들 손에 한 톨도 가지 않았다.

언론은 ‘삼성’을 언급하길 꺼리며 쉬쉬했고 노무현, 이명박, 한나라당, 통합신당도 태안에 와서 방제복 입고 사진 찍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감히 삼성을 거론하진 못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감독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았고, 딱값검찰은 삼성의 ‘종과실’에 눈감고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보상금액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검찰이 면죄부를 주자 삼성은 곧바로 기만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서 보상 책임

을 발뺌하며 주민들을 우롱했다. 피해 증거를 수집해 유조선 측에나 알아보라는 것이다.

특별법

그러나 이번 사고의 책임은 명백히 무리한 항해를 밀어붙인 삼성에게 있다. 삼성 예인선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관제소 호출과 운항 레이더의 충돌 경고를 무시하고 돌진했다. 크레인을 연결한 예인줄이 끊어졌는데도 운항을 강행한 ‘정신나간 선장’ 뒤에는 삼성중공업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삼성이 태안 바다와 어민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서 돌아왔다”
23일 상경 집회에서 태안 주민들이 기름 범벅인 수산물을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있는 가해자고 살인자다. 범죄 은폐에 협력한 정부, 언론, 검찰도 모두 한통속이고 공범이다.

범죄자 삼성과 그 공범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 올라, 지금 태안은 ‘반삼성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청정바다 대학살자 말 없는 살인자 삼성은 보상하라’, ‘타살된 태안바다 삼성그룹이 살려내라’ 등 주민들의 분노를 담은 팸플릿이 태안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18일 태안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은 “삼성에 영업정지가처분 1백 년을 선고하고, 삼성 사장을 징역 1백 년에 처하라”고 외치며 삼성에 맞선 총궐기를 다짐했다.

1월 23일에는 4천 명이 상경해 집회를 열고 삼성과 정부, 검찰을 성토했다. 태안 유류파해대책위 김진묵 위원장은 “삼성이 피해 주민들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은 서해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제안과 주민들의 요구대로 당장 정부가 선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사지에 몰린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 나아가 환경 파괴를 비롯한 온갖 범죄의 우두머리 이견희를 당장 구속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3일 상경 투쟁처럼, 정부·삼성·정치권·인수위 등을 직접 압박하는 대중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삼성 이견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이 이미 회의를 통해 뜻을 모았듯이 태안대책위와 협력해 태안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건설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방제작업에 1백20만 명이 참가했을 만큼 태안 사태에 대한 대중적 공분이 크다. 이들의 분노와 연대를 모아낸다면, 정부가 선보상을 하고 삼성에 책임을 묻도록 압박할 수 있다.

여기에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가 중요하다. 친재벌 정책을 쏟아내는 이견희의 하수인 이명박은 “[태안에서] 자원봉사하는 기본으로” 군말없이 일하라며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은 이견희를 단죄할 가장 강력한 주체다. 민주노총은 태안 주민들의 결의에 찬 투쟁에 연대하며 삼성의 환경 파괴 범죄에 맞선 투쟁도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태안에 가 보니] 민주노동당이 선점했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태안 주민들과 연대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운동권 정당’, ‘데모 당’이 자랑스러운 이름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승주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명박이 말한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알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덩치를 잔뜩 키워냈다. ‘기획재정부’로 ‘모피아(경제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토해양부’로 대운하 건설과 부동산 투기판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해 언론 통제 의도도 드러냈다. 인권위도 대통령 직속기구화했는데 파병, 비정규직 등에서 인권위가 낸 진보적 입장은 옛 일이 될 것이다. 온갖 반인권적 막말로 유명한 이명박 직속 인권위는 인권 ‘파괴’위가 될 것이다.

“통일부 없다고 통일 안 되겠냐”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럽서비스도 없겠다는 뜻이다. “얼굴이 덜 예쁜 마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는 이명박에게 여성부는 무가치한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였을 뿐이다.

일사천리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부패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 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모든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치는 것은 이미 노무현이 내용적으로 실천해 온 바다. 그래서 노무현의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 운운은 반갑기보다 역겹다.

이처럼 인권·평화 통일·성평등 등의 가치를 내팽개치면서 이명박이 살리려는 것은 ‘재벌·부자 경제’일 뿐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 자율화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본고사 부활의 서곡이 울렸고, 이에 발맞춰 사교육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대학 ‘자율화’ 속에 국공립대는 30퍼센트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고 누적 적립금을 6조 원 넘게 쌓아두고도 두 자리 수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집하는 사립대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인수위는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뿐 아니라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갈비·등뼈까지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5만 명 감축 계획

등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도 잊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교육권·건강권·생존권을 파괴하고 고용 불안을 늘리는 게 ‘경제 살리기’라는 것이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민 경제 죽이기’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이명박의 ‘재벌 경제 살리기’도 힘들 듯하다. 이명박은 ‘내가 당선하면 주가가 3천 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허풍을 떨곤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미국 경제 위기의 여파로 벌써 주가가 1천6백 선 아래로 내려갔다. 물가 상승과 수출 적자도 나타나고 있다.

‘재벌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서민 경제는 ‘다 죽이고 깡판쳐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금 진행중인 특검이 이명박의 경제 사기와 주가조작 범죄를 덮어버리고 면죄부를 준다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조명훈

민주노동당 혁신은 다원주의 방향이어야 한다

최일봉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비대위 자문단장에 임명한 장상환 교수는 평소 당 활동을 자주파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공공연히 분당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또, 심 비대위 대표의 오른팔 구실을 하고 있는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자신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전진'이 신당파와 다른없는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심 비대위 대표의 진의가 뭘지 헤아려 보려 애쓰는 당원들이 많다.

심상정 의원은 당의 결속을 바라는 수많은 당원들의 염원에 의해 비대위 대표에 추대됐지만, 원래 비대위 대표를 맡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평등파에 친화적이었다. 북한 핵실험과 일심회 사건 언급 때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과 남한의 마녀사냥적 국가보안법 반대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것하며 그의 "중북[친북] 청산"론 자체가 자주파의 중핵인 강경 주체주의자 동지들과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그는 비대위 대표 수락 전 〈프레시안〉 등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분당을 위협한 적이 있다. "항후 정치적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당권파의 북한 추종 노선 등 편협하고 폐쇄적인 당 체질이 끝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진보정당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분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12월 31일 밤 9시 MBC 뉴스 데스크)

그리고 그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사회적 기반 자체에 대해 못마땅하게 말한다. 민주노동에 의해 당이 창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듯도 하다. 또, "운동권"이 만든 당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고 싶어한다.

줄타기

그러므로 우리는 당이 닫고 있는 발판을 건어차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당의 뿌리를 부정하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안 되면 당을 켤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앉힌 셈이다. 물론 분당파들의 분당 위험에 못 이겨 결속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민주노동층앙파 지도자들과 '전진' 소수파 등 평등파들이 대부분 아직은 신당 참여에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에 대한 심 비대위 대표의 전망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지도자이면서도 민주노동당이 아닌 신당론자들을 달래려다 보니 그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신당론자들은 더 자신감이 생겨 당의 분열 양상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신당과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당 분열과 심 비대위 대표 자신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 대다수 평당원의 당 결속 염원과 심 비대위 대표의 정치적 기반 사이에 격차가 있다. 신당론자들은 이를 이용해, 심 비대위에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면서 자주파와 자신들 사이에 양극화를 피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원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다함께도!) 자주파라는 식으로 말이다.

자주파와 다함께를 제외한 나머지 당원들 사이에서 최대한 무리짓기를 해 이것이 심 비대위 대표에게 충분한 압력(또는 매력?)이 되면 신당론자들로서는 심 비대위 대표 자신이 신당 건설에 앞장설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해볼지도 하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인 심 의원이 신당과 명확히 선을 긋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당 분열과 심 비대위 대표 자신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책략 난무는 근본적으로 자주파나 평등파가 모두 민주노동당을 공동전선, 즉 다원적이고 느슨한 연합체로 규정하기 보다는 '당'이라는 모델에 집착해 거의 모든 정점에서 동맹자에게 의견일치를 강요하고 동맹자들의 정치적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 모델과 관계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자주파는 다수파이므로 다수결만을 고집하면 거의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다. 당연히 평등파는 이를 패권주의라 비판할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반발

이다. 하지만 소수파가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조차 무시하고 행동 통일을 파괴한다면, 아니 심지어 조직 파괴마저 자행하곤 한다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 마침내 돌이킬 수 없을만큼 악화될 것이다. 이런 때는 주요 리더들 가운데 누군가가 분당을 감행할 태세라던 실제로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분당

평등파들도 '당' 모델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 만약 그들이 지금보다 비할 데 없이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자주파 세력과 불가피한 타협을 해 나아가면서 조직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들이 당 내에서, 또는 당 밖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지도권을 행사하게 될 때가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평등파들도 스스로 새로운 패권주의 세력이 되려 애쓰고 있는 듯이 보인다. 더구나 좌경 색조를 어슴푸레 먼 자유주의적 매체들과 심지어 극우 매체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가며 그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심 비대위 대표는 "정파 답합 구조"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도 기꺼이 단일 정치 경향에 의한 일방주의를 구현할 것처럼 말하고 있어 도무지 갈등이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노자의 순수 개량주의 정당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공동전선 — 정치 원칙과 강령을 달리하는 상이한 정파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포괄적(단일정점을 둘러싼 게 아니라는 뜻에서)이고 상시적인(한시적이 아니라는 뜻에서) 신형 공동전선 — 이 아니라 당이어야 한다는 박노자 교수(이해 존경 생략)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말한다.

"... '김빠'들[주체주의자들]이 걸려진 뒤에 '정파'들은 헐파돼야 합니다. 우리가 '사민주의자와 조합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아닌, 진정한 계급 정당을 만들자면 정파 소속보다 당 소속이 우선돼야 되지요, 당에서 정파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들은 부끄러운 행위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다함께' 회원이면서도 당적을 보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당에서 투표할 때에 '다함께'의 의견보다 당의 이익과 전망, 그리고 넓게는 한국과 세계노동계급의 이익을 먼저 의식하고 소신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규율주의로 나가면 안 되지만 규율이 없는 당은 지금처럼 되게 돼 있어요, 정파 '보스'들의 입김을 조금 억제하고 당의 공적 성격을 높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 당을 다른 눈으로 볼 것입니다."(〈만간〉 12월 29일)

우선, 박노자는 도대체 다함께가 언제 국제노동계급과 한국 노동계급의 이익과 민주노동당의 이익과 전방보다 우리의 "정파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했고 우리 회원들이 "소신 없이 투표"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밀도 끝도 없이 매도하는 것은 토론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박노자는 민주집중적 조직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평회원들을 '보스'의 지시에 맹종하는 자율성 없는 꼭두각시로 보는 모종의 자율주의적 경향이 있는데, 자신 같은 중자율주의 또는 자율주의자만이 자율적이고 영혼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발로 아닐까? (물론 박노자의 자율주의적 이의 제기에는 반론은 지금 논지에서 벗어나므로 박노자가 다음 호(맛불)에 구체적으로 논점을 제기하면 기꺼이 응답하겠다.)

박노자의 제안대로 돌아가는 당은 반자본주의 변혁운동가들이 다함께에도 흔히 문제를 안겨줄 것이다. 가령 노조 지도자들이 배신하는 종류의 노동쟁의에 다함께로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으로서만 개입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없다. 2001년 초 계기후퇴 시점에서 일어난 대우차 노동쟁의를 지지하려 부평에 간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은 황광우 씨 등 당 간부들의 저지로 공장 점거 파업의 필요성과 대우차의 공기업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거야말로 "소신"을 억제받는 것이 아닌가?

엘리트주의

그리고 그런 당 안에서 주로 사회민주주의자와 "조합주의자"(도대체 박노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겠다)로 이뤄진 지도부는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패권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심지어 박노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아나키스트든 모두 당이 계급(또는 운동)의 단지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은 계급을 표현[대표]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계급(또는 운동)이 사기 저하해 있으면 기회주의로 빠지기 십상이고, 운동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는 운동을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당 바깥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모두 계급의식 부재의 표현으로 여기는 종파적 태도를 갖게 된다. 우리는 한국진보연대 간부들이 전체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양 착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곤 하는 것 못지않게,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의 평등파가 당에 입당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당 밖 세력", "종파"라고 부르는 일을 경험했다. 국제적으로도 우파 사회민주당들은 대부분 당내 급진파들을 견제하고 통제하려 해 왔다. 박노자의 제안은 이런 의미의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당파들이 당의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때 분당에 대해 토론이나 하고 있던 것이 박노자가 제안하는 "규율" 있는 자제인가? 이것이야말로 "국제 노동계급이나 남한 노동계급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일 아닌가?

박노자의 제안대로 '정파'가 '헐파'되는 당에는 우리 같은 근본적 사회변혁 운동가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박노자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조합주의자들")로만 이뤄진 확실한 개량주의 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비토르 세르주를 찬양하기에 혁명가인 줄 알았던 다함께 지도부는 저으기 실망했다. 〈만간〉에서 정세를 보는 눈이 비판적이 되더니 그 결과가 참 안타깝다.

비대위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김민식

분당 논란 때문에 거의 마비되다시피했던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항의 등 대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을 대체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개혁'과 맞서 싸우는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 돼야 한다.

심상정 비대위는 1월 19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당 혁신 구상의 대강을 밝혔다. 이 구상에는 지지할 만한 것들과 우려되는 것들이 뒤섞여 있다.

비대위가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극 지지할 만하다. 심상정 비대위장은 민주노동총과 전농 기반에 더해 "시민운동의 좌파진영, 문화예술, 사회적 약자, 환경·생태, 여성 등 다양한 부문운동, 검증된 기성 정치인 등에 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해 내가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들에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들에도 당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사회운동들과 유기적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했다. 특히, NGO들이 주도한 운동들에 대해서 그랬다. 가령, 2000년 총선 당시 낙선 운동이나 2004년 탄핵 반대 운동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종파적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외부 운동에 대해 종종 보였던 종파적 태도는 당 내부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다. 특히 평등파들이 강조했던 당원 교육 의무화나 예비당원 제도 등은 당 문호 개방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의 당 문호 개방 정책이 이런 오류들에 대한 자기비판적 교정을 뜻하는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당 외연 확대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동총의 영향력 약화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

심상정 비대위장이 노동할당제 축소를 언급한 것은 그래서 우려된다. 아마도 다른 사회운동 부문들에 당 문호를 개방하려면 노동할당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과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착취함과 동시에 그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성지향·인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한다.

따라서 억압에 맞서는 운동들이 승리하려면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과 결합돼야 한다. 자본주의의 체제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근거하고 있고 노동계급이 아말로 착취를 끝장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사회 계급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비록 조직률이 낮다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할당제 축소는 민주노동당이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수 있는 사회적 세력과 거리를 두는 효과를 낼 것이다.



최기영 당원 징계는 국가 탄압에 기회주의적으로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편, 비정규직 조직 확대 전략과 함께 "88만 원 세대 젊은 대학생"을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기반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조직 전략"도 지지할 만하다. 사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은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꽤 무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SBS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만큼 노무현에 대한 환멸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동영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저조했다. 이로부터 이득을 얻은 오른쪽 수혜자는 이명박이었고(42.5퍼센트), 왼쪽의 주된 수혜자는 문국현이었다(15.9퍼센트). 권영길 후보는 3.5퍼센트를 얻었다. 20대가 민주노동당 후보보다는 NGO와 유사한 스펙트럼을 지닌 문국현으로 상당히 쏠려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생을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정당적 색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레 단정할 필요는 없다. 20대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공산이 커 스스로 예비 노동자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만, 20대는 1990년대 말부터 노동조합 상근 간부 층이 형성되고 이들의 보수주의가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체로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세대라 할 수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이나 이랜드 투쟁 등에 노동조합의 동원이 미미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도 이런 인식에 한몫했다.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교훈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지, 노동과 거리두기가 되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비대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평가혁신 분야는 우려통하다. 비대위는 임시당대회에서 "편향적 친북당 이미지"에 대해 "명확한 평가와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심회 관련 사건"과 "북핵 자위론 논란"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편향적 친북당 이미지"는 당내 평

등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신화 성격이 짙다. 비대위가 스스로 사업 원칙이라고 밝혔듯이, "사실에 기초해 냉정하고, 엄정하게" "당 활동 평가"를 해야 한다.

'일심회 관련 사건'으로 말하자면, 자주파가 다수였던 당 지도부는 최기영 씨를 직책에서 해임하고 대국민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이 진실이다. 대다수 당 지도부는 '일심회' 사건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을 방어하지 않았다.

평등파들이 물고늘어지는 당원 정보 유출도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다. 최기영 씨 본인이 당원 정보 유출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도 당원 유출 관련 부분을 판결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원 정보 유출을 꼬투리 삼아 최기영 씨를 징계하려는 것은 국가 탄압에 기회주의적으로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선거주의 압력에 기회주의적으로 굴복한다면,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통받는 투사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커다란 환멸감을 느낄 것이다.

"북핵 자위론 논란"도 과장돼 있다. 북핵 개발 직후 방북한 당 대표단은 북핵실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래서 북한 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이 당 대표 연설에 불쾌해했던 것이다. 물론 자주파의 주요 지도자가 "북핵 자위론"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이 발언 때문에 당 전체가 "친북당 이미지"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계다가 민주노동당 같은 다정파 연합체에서 한 개인이, 설령 그가 간부라고 할지라도, 자기 사상을 표현한 것을(토론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단일 정파의 의제만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비대위가 당의 결속을 전제로 쇄신을 해야지 결속을 해치면서 잘못된 '쇄신'을 하려 한다면,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비대위를 지지했던 당원들로부터 매서운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케냐

선거 부정 항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다

켄 올렌데
케냐 출신 사회주의자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다시 시작된 지 사흘 만에 경찰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30명을 넘어섰다.

시위대는 대통령 므와이 키바키의 재선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키바키는 2007년 12월 2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재선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범한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다.

‘진실과 정의가 있는 평화를 바라는 케냐인들’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말썽 많은 대통령 선거의 투표수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수가 국회의원 선거 투표수보다 엄청나게 많았다.

야당인 오렌지민주운동(이하 ODM)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다. ODM은 총 의석 2백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한 반면, 키바키의 국민통합당(이하 PNU)은 43석을 얻는 데 그쳤다. PNU의 저항이 있었지만, ODM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자리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밖에서 정부의 공격에 대한 ODM의 대응은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지난주에 ODM은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취소하고, 정부 각료들이 소유한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시위대가 거리로 돌아왔다.

나이로비의 사회주의자 자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리의 저항은 아직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위협적 분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눈에 띄면 사살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많은 평화 단체들이 설립돼서 난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력한

정치 위기와 함께 종족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키바키와 같은 종족인 키쿠유족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키쿠유족 빈

지난해 12월 31일에 있었던 선거 부정 항의 시위

민들이 키쿠유족 소수 특권층 부자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투쟁 과정에서 종족적 폭력에 희생된 사람보다 경찰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더 많다. 선거 이후 6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유례 없는 사건은 아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가 나이로비 빈민가의 키쿠유족 ‘몽기키’[키쿠유어로 ‘군중’을 뜻한다] 갱단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5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몽기키 갱단은 지금 정부의 동맹 노릇을 하고 있다. 나이로비

의 노동조합 활동가 오티에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몽기키는 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제복을 맞춰 입고 무장하고 있다. 나는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 살던 나이로비 동부의 루아라카 지역에서 [몽기키에 의해] 쫓겨났다.”

IMF

역사가 다니엘 브랜치는 최근 <런던 리뷰 어브 북스>[영국에서 격주간 발행되는 정치·문학 평론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反)키쿠유족 활동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지역들은 과거에도 선거 시기에 비슷한 폭력 사건들을 경험했다. … 1992년과 1997년의 이른바 ‘부족 간 충돌’ 시기에 수백 명이 살해당하고 수천 명이 집에서 쫓겨났다. 자원을 둘러싼 지역사회들 내부의 갈등을 정치인들이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케냐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구들의 간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섬유산업이 붕괴해 섬유산업 노동자가 20만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급감했다.

자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방 언론은 [케냐] 사람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케냐 전체가 엉망진창인 것이 근본 원인이다.”

지속적인 항의 시위는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케냐의 부가 빈민들에게도 돌아가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하는데 성공해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증파”는 전쟁을 확산시킬 것이다

서방 정부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막 시작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주에 ‘안전한’ 도시라는 카불에서 국제 구호단체 직원들, 보안경비업체 직원들, 외교관들의 사고장인 세레나 호텔이 자살 폭탄 공격을 당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아프가니스탄 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비교했다.

세레나 호텔 공격은 7년간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서방 군사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마비됐다.

지난해 말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지상군을 파병하라고 요구했다.

게이츠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증파’뿐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장관들은 게이츠의 말에 동의했지만, 자국 내의 반전 정

서가 커질까 봐 두려워 남은 폴란드 헬기 두 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이에 실망한 게이츠는 이라크 주둔 미군 3천2백 명과 장갑차 5백 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뒤에 게이츠는 나토 동맹국들이 “쓸모없다”고 쏘아붙였다.

나토가 이렇게 분열하는 핵심에는 ‘의지의 동맹’ 일부의 인식, 즉 점령군이 저항세력을 분쇄할 수 없으므로 현지 탈레반 사령관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최근 영국 해외정보국은 이런 전략을 추구하다 굴욕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동맹국인 미국 몰래 탈레반과의 협상을 추진했다. 그것은 신노동당이 말하는 “부족 끌어들이기”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파키스탄

유럽연합 외교관으로 가장한 영국 해외정보국 요원 두 명이 탈레반 지도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정보국 요원임을 알아챈 카불 정부가 그들을 아프가니

스탄에서 쫓아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할 길 바란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증파’는 매력적인 전략으로 보일 수 있다.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면 외관상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군대가 진격하면 저항세력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 보통은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으로 간다 — 당분간 점령군은 지역을 평정하고 진전을 이뤄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저항세력의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영토 안에서도 저항세력들을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파키스탄의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파키스탄 군대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무샤라프는 불안정한 접경 지역에 수십만 명의 군대를 투입했지만,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고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현지 부족들의 대규모 반란을 촉발했다.

무샤라프가 투입한 군인 수백 명이 살해당했다. 무샤라프 정권에게 더 우려스러운 일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무샤라프는 이슬람 종교 학교(마드라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는 종교 학교들이 자신과 미국의 동맹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전쟁이 확산되자 미국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

<뉴욕 타임스>는 페샤와르[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대인 파키스탄 북서변경주(州)의 도시]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경찰의 목숨을 위협해 벌벌 떨게 만들었다” 하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의 국경 검문초소가 저항세력에게 점령당하고 군사기지가 로켓포탄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여러 도시들이 점차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페샤와르의 일부 지역들은 이미 “파키스탄의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온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하는커녕 파키스탄의 변경 지방조차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증파’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점차 휘청거리고 있는 미국의 필사적 도박이다.

사이먼 아사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1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난 1월 19~20일 한국을 방문해 두 차례 공개 강연을 했다. 이 글은 그가 1월 19일 강연한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를 녹취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3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며 "여전히 대학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에 연대를 보내며, 그들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1월 20일 강연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도 본지가 곧 녹취해 실을 예정이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 · 지정학적 불안정

현재 세계경제 위기 상황과 그 파장

저는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 · 지정학적 불안정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불안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난 8월 이후 금융체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위기가 금융체제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의 여파로 미국이 심각한 불황에 빠질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불황에 빠지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경제 호황을 이끌어 온 신용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현재 위기의 근원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자본주의는 동시에 두 방향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나는 IT와 전화통신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 투기적 붐인 이른바 '닷컴 붐'이 붕괴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9·11 공격이 초래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 뒤에는 미국 자본주의가 1970년대 이후 빠져 나오지 못한 장기적 위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은 이윤율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위기에 직면해 이자율을 대폭 삭감하고 세계경제에 값싼 신용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대출을 쉽게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대출하고 더 많이 소비할 것이고, 덕분에 경제가 되살아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데 큰 구실을 했

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새로운 부문 — 부동산 시장 — 에서 투기 열풍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영국과 기타 주요 경제들에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중간계급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자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소비하는 데 썼습니다.

이런 소비 확대로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부활과 중국 경제 호황 사이의 상호작용 덕분에 세계 자본주의가 지난 몇 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와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 적자를 지불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경제로부터 갈수록 많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작용

전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중국과 동아시아 경제들이 공업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 그들은 수출로 번 돈을 미국에 다시 빌려줘 미국이 중국과 동아시아의 공업제품을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중국의 호황은 나머지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독일, 일본, 한

국 같은 공업 국가들은 기계류와 하이테크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집중했고, 중국은 그 제품들을 사용해 미국에 수출할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 경제들도 중국에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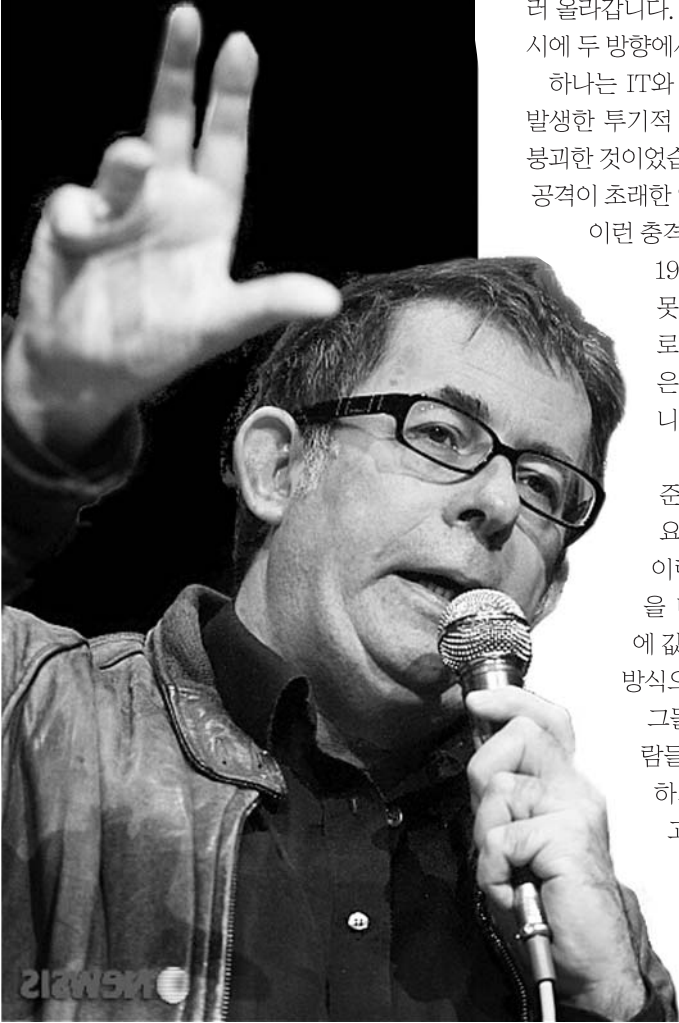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경제 성장은 미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값싼 신용을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투기적 대출이 확대되면서 결국 금융체제가 붕괴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붕괴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신용이 불량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많은 신용이 공급되고 투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부채상환이 불확실한 차용자들에게 돈을 대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의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로 확산됐습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노던록이라는 은행이 미국 주택 시장 위기 때문에 파산하면서

» 8면으로 이어짐



》7면에서 이어짐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년층에 돈을 예금해 둔 사람들이 은행 밖에 길게 줄을 서서 예금 인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광경은 맑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던 1860년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결과로 세계 금융체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신들이 빌려준 대출금 중 상당한 양의 상황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은행들이 입을 손실은 4천억~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금융체제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업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에서 신용체제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은 자본축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본축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맑스는 동시에 그 한계가 곧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체제는 예전에 발생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

례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은행들의 위기가 발생해서 일본 경제는 그 뒤로 10년 동안 혼란을 겪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25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후퇴는 아시아와 유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중앙은행들이 5년 전에 했던 조처를 다시 취해 돈을 경제에 쏟아 부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수백 억 달러를 금융체제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000~2001년에 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 이자율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그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성장의 여파로 석유, 천연가스, 각종 천연자원, 식량 가격이 크게 올라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투기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당

장 이자율은 크게 낮추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은 이자율이 경제활동을 너무 활성화해서 물가상승률이 1970년대 수준에 접근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가치 하락

우리가 지금껏 말한 경향들이 결합돼 1970년대 같은 심각한 경제 불황이 발생할지 아니면 단지 1~2년 동안의 경기 후퇴에 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좀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은 분명합니다. 예컨대, 자본가 계급 사이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 20퍼센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배계급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1조4천억

달러의 외환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보유고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이 그런 상황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랍 지배자들은 석유 가격 상승을 기뻐하지만, 석유 가격을 매기는 달러화의 가치가 최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합니다.

달러화의 하락에 따른 매우 중요한 변화로, 유럽연합의 공식 통화인 유로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로가 세계 금융체제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세기 전반기에 발생했던 전 세계적 통화 불안정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신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력의 이동을 보여 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 경제력의 이동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로, 동아시아와 아랍의 기업들이 월스트리트 금융기업들의 주식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력의 이동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스트리트를 사들이고 있는 동아시아와 중동의 이른바 ‘국부 펀드들’은 국영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몰락한 영국 은행인 노던록도 국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사유화되어야 하고,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반대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조차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천5백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헤게모니, 지정학적 전선에서도 도전받다

오늘날 미국의 헤게모니[패권]는 단지 경제 전선에서만뿐 아니라, 지정학적 전선에서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 지배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의 결과로 북동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활 모양의 불안정 지역이 형성됐습니다. 이곳에서 미국과 그 동맹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물론 이라크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중파’ 정책으로 더 많은 미군을 바그다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고, 상황을 잠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정치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라크를 미국식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부시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미국 정보 기관들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란이 몇 년 전에 핵무기 개발을 종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CIA와 미국 국방부가 부시 정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부시가 이라크 같은 재앙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부시 같은 전쟁광이 자기 첩자와 장군 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는 확실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는 다른 곳에서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활의 양쪽 끝에 해당하는 파키스탄과 케냐의 상황을 보면 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 직후에 파키스탄인민당(PPP) 당수 베나지르 부토가 암살됐습니다. CIA는 알카에다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토의 암살은 부시 정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무사라프 군사 독재 정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돕는 핵심 동맹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 파키스탄으로 확산되면서 무사라프 정부가 크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부토가 총리가 돼서 무사라프 정부에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부토의 암살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미국 정부는 현재 대안이 될 만한 인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활의 다른 쪽 끝인 북동아프리카를 봅시다. 미국 국방부는 북동아프리카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에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략하는 것을 공공연히 지원했습니다. 지금 불안정에 시달리는 케냐는 소말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케냐의 키바키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영국 정부의 핵심 동맹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는 케냐에 미군 기지를 건설했고, 미국과 영국 정

부와 국제금융기구들은 케냐에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활 모양의 불안정 지역

그 과정에서 그들은 키바키 정부의 부패 행위에 눈감았고, 케냐 대중이 겪는 끔찍한 빈곤을 무시했습니다. 1년 전에 저와 제 옆에 있는 한국어 통역자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슬럼가 중의 하나인 키바나에서 도시 중심가까지 행진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지금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통과하려 애쓴 행진로를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 그 길을 따라 행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케냐 시위대들은 폭동진압 경

찰들의 방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부족들 간 갈등 때문에 정치적 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CNN조차 케냐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두 부족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케냐의 상황은 신자유주의 하의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지배자들은 부패하고 대중을 탄압하며, 대중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케냐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몇 십 년 동안 축적된 갈등과 증오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케냐에 관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케냐 대통령이 재선되려고 부정 선거를 자행하다니 참으로 끔찍하지 않는가?”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구실을 해 왔고 서방의 소중한 동맹인데 그런 불안정이 발생하다니 끔찍하지 않는가?” 하고 말합니다.

케냐와 파키스탄의 불안정은 전 세계적 제국주의 전쟁물이와, 개별 국가의 투쟁과 갈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세계체제이며 국제적으로 부자와 노동자·빈민 대중 사이의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한 위기들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서로 결합되면서 지금 세계 지배계급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조지 부시는 황제처럼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시의 중동 순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이제 팔사냥고 우스운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시는, 빌 클린턴이 말년에 그랬듯이, 느닷없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부시가 다녀간 직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진 좌파 정당들의 위기, 그러나 좌파 혁신은 여전히 과제

지금까지 지배계급이 직면한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케냐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과연 누가 키바키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야당 지도자 오딩가는 지배계급의 일원으로 키바키처럼 부족 정치를 악용할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좌파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대중 행동을 주도하면서 대안을 제공할 위치에 있지 못합

니다. 좌파가 그런 수준에 가장 근접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내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는 유럽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급진 좌파의 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우익에 맞선 대안만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자유주의’에 맞선 대안 제시를 목표로 새로운 좌파 정당이 등장하거나 기존 좌파 정당들이 재편됐습니다. 사회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 중에는 기존 사회민주주의의 정당들이 많은데, 그들은 집권 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최악의 사례가 바로 토니 블레어의 영국 신노동당 정부였 습니다.

사실, 새로운 유럽 좌파들은 새로운 저항 운동에 고무돼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1999년 미국 시애틀 WTO 반대 시위와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G8 반대 시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나중에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으로 이어져 2003년 초에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는데, 2003년 2월 15일 시위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좌파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줬고, 좌파들은 21

세기에도 자신들이 여전히 긍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2003년 2월 15일 대규모 반전 시위 이후 거의 5년이 지난 오늘날, 유럽 급진 좌파들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전략의 중요성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은 2001년 제노바 G8 반대 시위와 2002년 이탈리아 파렌체에서 열린 첫 번째 유럽사회포럼을 조직하는데 매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히 우경화했습니다. 재건공산당은 프로디의 중도좌파 정부에 입각해서 이탈리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결정을 지지

했습니다.

영국의 리스펙트는 2003년의 대규모 반전 운동으로부터 탄생한 정당입니다. 재가속한 SWP(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조지 겔로웨이 같은 노동당 출신 의원, 그리고 무슬림공동체의 사람들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결집했습니다. 불행히도 지난해 말에 리스펙트 반전 시위 이후 거의 5년이 지난 오늘날, 유럽 급진 좌파들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왜 유럽 급진 좌파 정당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했을까요? 시애틀, 제노바와 대규모 반전 시위의 성공에 따른 초기의 도취감이 사라진 후에 이 정당들은 급진화를 더 진행시킬 방법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 나서서 “우리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진시키려

면 그것에 걸맞은 전략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개발하는지는 급진 좌파 정당들의 정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특히 급진 좌파 정당들 내에서 개량주의적 정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경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급진 좌파 정당들의 위기가 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진 좌파 정당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좌파 혁신 계획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채 급진 좌파 정당들이 우경 기회주의적 정책을 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애틀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개량주의적 정치 배경을 가졌건 혁명적 사회주의자건 혹은 아무런 정치가

없진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 분석했던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정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좌파를 혁신하기 위한 투쟁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자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은 2007년에도 어김없이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 삭감을 겪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도 축소될 것입니다. 물가상승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분명히 대변하고 기존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대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면으로 이어짐

1월 22일 미국 증시 폭락 - 세계적 불황의 서곡인가?

2001년 제노바 G8 반대 시위

» 9면에서 이어짐

정리 발언

진정한 사회주의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사회주의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플로어에서 훌륭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너무 ‘약자들’에게만 신경 쓴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부산의 노동자든 케냐 나이로비의 빈민이든 상관없이 억압받는 사람, 착취받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 착취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입니다. 착취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이 자기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소련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정반대로 봤고, 그것의 몰락을 환영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또 다른 분은 신자유주의가 최소한 인권을 유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수도는 미국인데, 미국 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기타 비밀 감옥을 운영하고 고문 자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유주의 제2 수도인 영국의 정부는 누군가 테러 활동과 연관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을 재판 없이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시를 창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유주의가 최소한 인권을 보호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동아시아가 전 세계적 불안정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은 중동에서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는 지역이고 중동 석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 중동은 매우 불안정한 지역으로 미국과 그 동맹들에 맞선 저항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 이 지역에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동아시아가 더 불안정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가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그 덕분에 새로운 열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의 개입에 따른 긴장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지역 열강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이 지역의 패권 세력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을 이용하고 인도와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2005년 미국-인도 정상회담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케인스주의에는 일말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케인스주의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의 충격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시장을 맹신하라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케인스주의는 경제에 개입하기 위해 국민국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국민국가를 넘어서] 세계체제입니다. 둘째, 일자리를 늘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제 정책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런 기업들에 맞설 수 없습니다.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이 필요합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빈곤과 고통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노동의 종류, 높은 생산성, 그리고 그들이 사장들을 위해 창출하는 이윤의 양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 생각의 논리적인 결론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고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지고, 그들의 노조 조직력과 임금이 더 하락할수록 정규직의 지위는 그만큼 더 좋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더 약해질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더 쉬워지면, 사장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좀더 쉽게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조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처 정부에서 광부 노동자, 부두 노동자, 자동차 노동자 등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운동이 철저히 분쇄됐습니다.

그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가 형성됐고, 노동조건이 악화됐습니다. 착취받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과 연대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분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이 맥락에서 어떻게 더 단결되고 더 강력 한 노동자·억압받는 사람들의 운동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와 영국의 제 동지들이 1980년대 영국 광부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광부들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영국 노동운동 내에서 혁명적 좌파 정치와 전투적 노동계급 투쟁을 지지하는 정치가 너무 약했습니다. 결국 사장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는 정치가 노동운동 안에서 영향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광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과 패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급 운동이 장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좌파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노동운동의 산물인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의 시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게다가 분당을 바라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우파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분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게다가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세계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좌파로 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블로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보더라도, 블로그는 진정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토론이 진행중이라는 환상을 줄 뿐입니다. 심지어 진지한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작업장에서, 혹은 동료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사회주의 노동계급 정치 원칙에 관해 토론해야 합니다.

부활한 이집트 노동자 투쟁

마지막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흔히 사회주의 사상은 대학교에 있고 책임질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때나 사회주의 사상에 몰두하는 것이지,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으면 사회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같은 사람은 확실히 정신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현실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쟁과 개인주의와 착취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에 투항하거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원칙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미 언급한 연대의 원칙입니다. 억압받는 사람과 착취받는 사람들 분열을 거부하고 억압자에 맞서 서로 단결해야 합니다.

사실, 사회주의의 기초도 연대에 기반한 세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개악에 맞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방식과 사회주의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사이에는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가 단지 멋진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주의와 경쟁에 투항하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이란 저항하는 삶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 봅시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투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직 이 투쟁의 일부분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권합니다. 착취와 전쟁과 고통과 불의를 함께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

녹취·정리 김용욱

맑스와 《자본론》 ①

신비화된 체제의 베일을 벗기다

이 글은 《자본론》에 대한 4회 연재 기사의 첫 편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신의 기원을 은폐하는지 알아본다.

1872년에 쓴 편지에서 칼 맑스는 불어판 《자본론》을 연재물 형식으로 출판하려는 계획을 칭찬했다.

“그렇게 하면 《자본론》은 노동자들에게 더 쉽게 읽힐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고려사항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론》은 일반적인 경제학 저서들과는 사뭇 다르다. 한 장, 한 장이 독설로 가득하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모든 혁신이 개별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진다.”

“그런 혁신은 노동자의 인격을 조각내고, 그를 한낱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며, 노동에서 마지막 남은 즐거움마저 말살해 노동을 혐오스러운 고초로 만든다.”

맑스는 오로지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을 규명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타도를 재촉할 목적으로 《자본론》 세 권을 집필했다.

그러나 맑스는 또한 독자들이 《자본론》과 씨름하다 지쳐서 “사기저하” 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프랑스 출판사에 보낸, 앞서 말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과학에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과학에 이르는 험난한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만이 그 빛나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본론》을 읽다가 많은 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맑스의 글쓰기 스타일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본론》의 주제 자체, 곧 자본주의의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전의 체제들과는 다르다.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서 지구상에 등장한 뒤로 줄곧 여러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필요한 재화를 생산해 왔다.

옛날에는 생산 활동이 수렵 또는 농경 위주였던 반면 오늘날의 생산 활동에는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이전 사회의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소비할 재화를 생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자동차를 하루에만 몇 대씩 만드는 노동자들도 막상 자신은 평생 차를 몇 대 소유하지 못하며, 그들이 자동차만으로 먹고살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맥도널드 노동자들이 햄버거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품 물신주의

《자본론》 첫 페이지에 맑스가 썼듯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적인 사회의 부는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상품 더미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 체제다. 즉 여기서는 재화가 시장에 팔리기 위해 생산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피라미드 – 착취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던 봉건제와 달리 자본주의에서 착취 관계는 은폐되고 ‘물신화’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뤄지는 극히 단순한 경제 행위, 가령 구멍가게에서 신문을 사는 행위를 생각해 보자. 돈이 당신 손을 떠나고 그 대가로 상품 하나가 손에 쥐어진다.

이 행위는 겉으로 보면 물건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듯 보인다(동전 몇 푼에 신문 한 부). 하지만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신문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신문의 콘텐츠는 기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생산했다. 활자는 인쇄소의 노동자들이 인쇄했고, 신문지 자체는 또 다른 생산 과정을 거쳤다. 또 그 밖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인쇄기와 기자들의 컴퓨터를 생산했다. 단순한 물건 대 물건의 교환처럼 보이

는 행위가 사실은 끝없이 펼쳐진 인간 대 인간의 네트워크(특히 상품 생산에 관여하는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들을 연결짓는 구실을 한다.

이전 사회에서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눈에 뻑히 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런 관계가 은폐되고 불가사의해진다. “사람들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물건들 간의 관계 같은 신비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맑스는 이것을 “상품 물신주의”라고 불렀다.

종교적 의미의 “물신”은 신통력을 지닌 물건을 뜻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간이 생산한 물건이 그 자체의 생명력을 얻어 “물신화”한다.

이러한 물신은 종교적 의미의 물신과 다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물건들이 실제로 신통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이 가능한 특수한 “보편적” 상품인 돈을 생각해 보자. 돈은 매우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다.

심지어 돈은 이자 등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돈이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신비화돼 있다.

《자본론》이 쉽지 않은 것은 맑스가 자본주의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체제의 근저에 놓인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헤쳤기 때문이다.

《자본론》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은 간단하다.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유 한 팩과 신문 한 부의 가격이 같은 것은 왜일까? 우유와 신문은 용도와 성질이 전혀 다른 물건들이다. 생산된 방식도 서로 다르다. 그런데도 둘이 같은 가격에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다룰 것이다.

조지프 추나라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데다, 금리 인하 정책은 달러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촉발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한 달 앞도 못 보고 “임기 첫해에 주가를 3천까지 올리겠

다”, “경제성장 6퍼센트를 달성하겠다”하고 큰소리친 바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주가를 지탱하려 지난 일주일 새 연금금 1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국민연금 9조 원을 주식시장에 조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연금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주가 폭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신용경색이 미국 경제 불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중국 등의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던 많은 주류 경제학

자·언론 등의 전망은 무색해졌고 ‘패닉의 세계화’가 벌어졌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튼튼하다”고 주장해 온 부시가 지난 1월 18일에 경기 부양을 위해 1천4백50억 달러(약 1백50조 원) 상당의 세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위기의 심각성만 드러냈을 뿐 효과가 없었다. 거품의 규모가 무려 수조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패닉의 세계화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은

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에 48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발표해 이번 주가 폭락을 이끌었다. 중국 금융기관들도 미국의 신용 위기에 직접 연루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은 미국 경기 침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주가 폭락에서 보듯 전 세계적인 불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수록 전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서민에게 지우려 할 것이다. 공공연히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대규모 사유화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법 질서 확립” 운운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책임 전가와 공격에 맞선 싸움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강동훈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③1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아마 정치학 사전에서 가장 남용되는 단어일 것이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반동적인 정치인들 — 부시 · 체니 · 블레이어 · 대처 · 베를루스코니 — 이 거의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권들이 민주 정부를 자처한다. 예컨대,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이끄는 집권당의 이름은 민족민주당이고,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도 민중민주주의 체제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결코 사기꾼이나 기회주의자로 치부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떠올릴 수 있다. 넬슨 만델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법정에서 선언한 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남부의 거리와 감옥에서 운동을 펼치다가 마침내 목숨을 잃은 마틴 루터 킹도 [흑인들의] 민주적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 사람이었다. 칼 맑스도 헌신적인 민주주의자였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영국 내전 당시의 수평파에서부터 차티스트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레지스탕스, 1990년대의 한국 노동자들을 거쳐 오늘날 버마의 승려들과 파키스탄의 변호사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흔히 민주주의 체제로 생각되는 사회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 대신 ‘민주주의’에 대해 물어 봐도 그들은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누가 집권하든 ‘저들’은 모두 똑같다는 확신과 경멸을 나타낼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철학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발전한 정치적이상이자 제도였다. ‘민중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는 유럽의 봉건제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비롯한 것이다.

미사여구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유럽의 압도적인 질서는 봉건제였다. 봉건제 사회는 영주 · 귀족(세습 대지주)과 농민으로 분열된 사회였다. 이들 사회는 소규모 공국(公國)에서 대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그 지배자는 이런저런 제후 · 왕 · 황제였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토에서 가장 유

력한 가문을 대표했고 흔히 신이 주신 권리에 따라 지배하고 있노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었다. 나머지 세계의 대부분 지역, 예컨대 중국과 인도 등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비민주적인 체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봉건 질서 안에서 점차 새로운 계급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도시의 상인이나 소규모 수공업자가 된 장인들이었다. 흔히 그들을 ‘부르거’(시민)라고 불렀고, 맑스가 사용한 ‘부르주아지’라는 용어는 여기서 유래했다.

봉건제 하에서 부르주아지는 아무리 부유하고 교양이 있어도 귀족에게 이등 시민 취급을 당했고 정치 권력을 거부당했다. 부르주아지는 귀족과 국왕의 전제 권력이 부르주아지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도 억누르고 있다고 여기고 그런 전제 권력에 점차 분노했다.

마침내 부르주아지는 사회 지도층 자리에서 귀족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지위를 대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1642년의 영국 혁명, 미국 독립 전쟁, 1789년의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보다 작은 전투들이 수없이 벌어졌다.

그러나 상인과 수공업자 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전쟁과 혁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그들은 도시 빈민과 농민 등 ‘민중’을 동원해야 했다. 사회 하층민들이 스스로 들고일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부르주아

지는 책략을 써서 하층민들의 지도자가 돼야 했다. 그렇게 하려면 대중에게 뭔가를 제시할 정치 철학이 필요했다.

이런 투쟁들 속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미사여구 — 법치, 평등권, 언론의 자유, 대의제, 상속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책임지는 정부 — 가 탄생했다.

그러나 처음에 민주주의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부르주아지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재산을 폐지하는 데 투표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책임지는 정부는 좋지만, 정부가 부르주아지에게 책임져야지 노동 대중에게 책임져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난 것은 맞지만, 흑인 노예와 ‘원주민’과 여성과 십중팔구 공장 노동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거인 요정이 일단 병에서 뛰쳐나오자 그것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노동계급의 힘이 커지자 그들은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대중 조직인 차티스트들은 ‘1인 1표’ 문제에 집중했다.

그 뒤 19세기 말쯤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더라도 그들이 부르주아지를 제거하는 데 투표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자신의 자본가 사장에게 투표하도록 일부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다. 그 때 이

후 정치적 반동 세력과 사기꾼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한다고 자처하기 시작했다.(그러면서도 ‘때때로’ 민주주의가 없어지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란다.)

경제적 · 사회적 민주주의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과거에도 민주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잘못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민주주의는 노동 대중의 현실적 필요와 무관하다? 이런 결론은 재앙적 오류일 것이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과 많은 나라들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심지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나라의 민주주의가 너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 왔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더해 경제적 · 사회적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자본가 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의 결정적 지렛대가 의회나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기업과 은행의 이사회실에 있고 둘째, 국가의 상설 기구, 특히 군대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은행의 이사회실은 자본가 계급이 직접 소유하고 있고, 군대 같은 국가의 상설 기구는 수많은 경제적 · 사회적 · 이데올로기적 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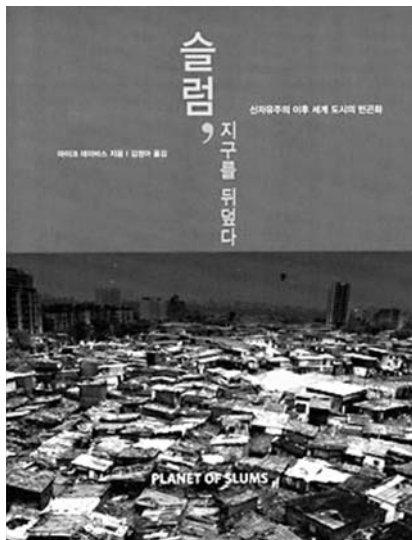
» 13면으로 이어짐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마이크 데이비스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도시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늘로 뻗은 마천루? 아름다운 야경?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의 자본주의 도시에는 그 아름다움을 질식시키고도 남은 가난이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는 도시빈곤의 도시별, 국가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현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세기에 도시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1950년에 인구 1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전 세계에서 86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백 개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빈곤도 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빈곤율은 1980~1986년 사이에 무려 50퍼센트나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슬럼 인구는 해마다 2천5백만 명씩 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차드의 슬럼인구 비율은 무려 99.4퍼센트며, 아프가니스탄은 98.5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끔찍한 현실은 “테크놀로지의 필연적 발전이 아니라 전 지구적 정치위기,

인도 뭄바이의 슬럼 - 갈수록 확대되는 슬럼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즉 1970년대 세계적 채무위기와 뒤이은 1980년대 IMF 주도의 제3세계 구조조정의 산물”이라고 마이크 데이비스는 지적한다.

1980년대 IMF와 세계은행은 채무를 빌미로 제3세계에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이것은 사유화, 농산물 보조금 중단, 공공부문의 무자비한 축소를 의미했다. 그 결과 제3세계에서 소농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노동자들은 실업과 소득 폭락을 겪었다.

마이크 데이비스가 썼듯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세계은행과 IMF에 “피를 남김없이 빨린” 나이지리아에서는 아이 5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죽는다.

슬럼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 이하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홍콩 슬럼에는 “새장”이라는 독신자용 침대가 있다. 이 침대방에서는 사람 한 명당 생활공간이 0.5평에 불과하다.

서는 슬럼을 철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주민을 납치하고 임산부와 아이를 폭행했다.

필리핀 지주들은 들쥐나 고양이에게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슬럼가에 푼다. 그러면 고통에 몸부림치는 들쥐나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불을 옮기고 다닌다.

물론 쫓아낸다고 해서 슬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부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으로 옮겨간다.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나면 생명이 위협해지는 곳 말이다.

정부들은 이따금씩 슬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지만, 그 혜택은 빈민들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인도 델리에서는 개발청이 소규모 부지 50만 개를 분양했지만,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공공주택의 5분의 1만이 지어졌고, 그조차 빈민들에게 돌아간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구조조정이 만들어낸 슬럼의 빠른 성장에 대해 훌륭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슬럼과 함께 “비공식 노동계급”의 성장 때문에 노동계급이 해체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소셜리스트워커〉에 썼듯이, 예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대한 슬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곳은 일련의 대중파업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는 기니의 코나크리에서 일어난 총파업과 함께 시작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이 파업들은 조직된 노동계급이 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주체임을 보여 준다.

슬럼, 가난한 이들이 내뿜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아프리카 판자촌 어느 한 구석에서 배고픔과 질병으로 우는 아이의 눈빛을 보고, 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궁금해 해 본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승영

노동계급의 해체?

국가가 슬럼을 없애는 방식은 빈곤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빈자들을 “청소”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1988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수도권에서 72만 명을 쫓아냈고, 중국은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35만 명을 쫓아냈다. 산토도밍고에

자유 덕분에 사회주의 신문도 발행될 수 있다. 심지어 잡담 장소로 전락한 의회도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연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출된 노동당 정부가 아예 선출되지 않은 정부보다는 낫다.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법치가 극단적인 탄압을 막아줄 약간의 보호 장치 구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주도해야 하고 단지 정치적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노동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사회 혁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그런 사회 혁명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믹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12면에서 이어짐

로 자본가 계급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자본가 계급이 의회를 잡담 장소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정부를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전 세계의 개량주의 정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 라고 부른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노동자 민주주의, 즉 진정한 대중의 권력을 뜻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서 생산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 생활의 다른 영역들로 확대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공장·콜센터·학교·병원 등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군대·법원·행정부처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와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혁명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해서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 덕분에, 그리고 1956년의 헝가리 혁명과 1979년의 이란 혁명 같은 다른 혁명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의 핵심 기구가 소비에트 — 작업장 집회에서 선출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대의원들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평의회 —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지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 대중을 소외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영국판 〈조선일보〉]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언론의

새로 나온 소책자



《민주노동당의 위기》

《위기의 민주노동당 —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제2개정증보판

다함께 펴냄

값 3천 원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 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1월 28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 와서

이명박 대항 투쟁의 갈 길은 무엇인가

나는 지난 1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 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태인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대항운동본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 이 토론회에서 모든 연사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본질을 잘 폭로하는 것을 듣고 인상 깊었다.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에서 온 발제자들은 교육·의료·언론 등 공공부문에서 시장주의 정책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악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폭로했다. 정태인 본부장은 “공공부문 이명박 쓰나미”가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광범한 연대 투쟁을 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쉬웠던 것은 토론회 전반에 흐른 비판주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이완되고 사기 저하에 빠져있다”고 했다. 정태인 본부장도 국민들은 사유화를 동의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싸우면 ‘철밥그릇 투쟁’이라고 비난할 것이라며 우울한 전망을 내놔다. 언론노조 정책국장도 “우리는 대안이 없다. 무엇을 해도 되

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다보니 정규직 양보론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양보해 비정규직 일부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 것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태인 본부장도 “이제는 정규직이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투쟁이 안 된다”며 정규직 양보론에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정규직 양보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적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지배자들의 ‘노동귀족론’을 강화시킬 뿐 결코 올바른 대안일 수 없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2백85명을 ‘완전 정규직화’했다. 이것은 지난

여름 6일간 파업의 성과였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완전한 고용안정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2002년 사유화에 맞선 철도·발전·가스 공공 3사 노조의 파업은 여론조사에서 84퍼센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문 사유화가 불려올 재앙에 반대했던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등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투쟁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은 비판하면서 후퇴할 때가 아니라 이런 투쟁들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면서 이명박 대항 투쟁을 준비할 때다.

조명지



‘다함께’ 동지들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폭염의 기억을 안고 갇힌 지 6개월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 현실의 안타까움, 현장의 치열함·아쉬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

쫄쫄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기억이자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신 염려와 관심에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너그려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투쟁 여건 속에서도 쫄쫄이 잘 싸우고 있는 모든 비정규 투쟁 사업장에 많은 연대와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08년 1월 13일 영등포구치소에서.

‘다함께’ 안병문 드림.

안병문 동지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1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주간 <맛볼>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02-2271-2395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3(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3(예금주: 백은진)

“법무부의 인간사냥이야말로 불법”

조지영

지난 12월 26일 타이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맹장 수술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서였다. 지난 15일에는 한 조선족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에 더해, ‘인간사냥’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사건들이다.

바로 이것이 이주노조탄압분쇄 농성단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다. 농성은 이제 50여 일째로 접어들었다.

인간사냥

1월 11일 농성단은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민주노총으로 농성장을 옮겼고 이주노조 방어와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일 보신각에서는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집회가 열렸다. 2백여 명의 이주노동

자, 한국인 노동자, 연대 단체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법무부의 인간사냥이야말로 불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4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조건에서 함께 일하다 똑같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기 투쟁중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코스콤 노동자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몇 차례나 이주노조의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의 정을 나누고 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 줬다. 이런 연대가 더 확대될 때 이주노조는 승리할 것이다.

1월 20일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집회

슈바시를 석방하라!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째 수감중인 이주노조 조합원 슈바시 동지는 지난 1월 4일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병 때문에 한 달새 몸무게가 5킬로그램이나 줄었다.

슈바시는 지난해 7월 3일 단속 권한

도 없는 경찰에 의해 단속돼 수감됐다. 보호소에서 그는 수용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소 직원들의 괴롭힘과 욕설을 감수하며 싸워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32명은 “입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일시 보호해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슈바시 동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법무부(출입국기획과) 항의전화:
02-500-9031~2

항의팩스:
02-2110-3079(법무부)
02-500-9059(출입국 기획과)

우체국 사유화를 저지하라

최근 이명박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한 뒤 2012년까지 사유화할 계획을 밝혔다. 전체 우체국 노동자의 30퍼센트인 1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 전국체신노동조합 지도부는 1월 20일 1만 명 규모의 총력 투쟁 대회를 추진하다가 돌연 취소해 버렸다.

1월 19일 면담에서 인수위 부위원장 김형오가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미 확정해서 국회로 넘긴 계획을 ‘없다’고 하자 거짓말에 속아 준 것이다.

도배

이 때문에 체신노조 웹사이트는 노조원들의 거센 항의로 도배됐다.

“삭발하고 휘발유통 들고 인수위나 한나라당에 가서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이라도 오토바이를 앞세워 대규모 시위를 벌여야 한다.”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경북지방본부장, 용인수지·용산·서인천우체국 지부장들의 즉각 투쟁 호소 글에는 지지글이 쏟아지고 있다.

체신 민주노동자회도 투쟁 성명서를 발표했다. 별정우체국 노동자들 역시 “4천여 명 별정 우체국 직원들은 민영화를 결단코 반대하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투지를 밝혔다.

그러나 체신노조 지도부는 이미 파탄난 ‘정책연대’에 연연하며 23일 이명박의 한국노총 방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체신노조 지도부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투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또, 현장의 활동가들과 현장 지도부는 체신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방기할 경우를 대비해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오정숙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1월 22일 70여 명이 참가한 ‘새로운진보정당운동(준)’ 주최 토론회에서 진보정치연구소 전 부소장인 조현연 교수와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가 발제를 했다.

며칠 전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조현연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문제는 “자주파가 2001년 9월 테제를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주파와는 함께할 수 없어 분당을 한다는 것은 신당파들이 강조하는 다양성·다원주의와 모순된다. 조현연 교수 자신도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길을 인정한다”고 했으면서 말이다.

지극히 짧게만 허락된 청중 토론 때 내가 이 점을 지적하자 조현연 교수는 “종북파라는 민족 패러다임은 진보가 아니”라고 답했다. 다원주의는 말뿐인 것이다.

조현연 교수는 신당의 가치와 비전으로 자본주의 질곡 극복하기, 적록연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적극 개입하기, 여성의 주체적 참여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여러 정책들에도 담겨 있는 이런 가치들이 왜 분당의 근거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신당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의견이 분분해 보였다. 박승옥 대표는 민주노총을 “장사꾼 조합”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전투성을 비난했는데 이것은 신당론자들이 정규직 노조의 투쟁자제와 양보를 함축하며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나머지에서는 별 공통점이 없었다. 조현연 교수가 진보의 청사진이라고 말한 《사회 국가》는 ‘진보적 성장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박승옥 대표는 “경제성장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승옥 대표는 “운동 정치와 정당 정치는 국가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해 정당을 만들자는 것인지도 불분명했다. 반면, 조현연 교수는 “집권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원주의

한국사회당·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함께하는 시민행동·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에서 온 토론자들은 신당의 미래에 관해 우려했다.

그 중 금민 한국사회당 전 대표의 발언이

압권이었다. 금민 전 대표는 “종북주의 청산과 민주노총 의존 탈피는 사회당이 10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과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요섭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 집행위원은 “심상정 비대위가 잘 된다면 진보 신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 뒤, “신당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민주노동당이 문을 닫지 않는다면 그 아류처럼 보일 것이다” 하고 덧붙였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종북파[에 대해] 말하는데 누군 오고 누군 오지 말아야 하나?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직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토론자 중 누구도 신당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분당파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 준 것이다.

김어진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이승열 사무국장 인터뷰

“삼성의 무한 책임을 입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사고 이후 50여 일이 지났는데 지금 태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지락, 설기 등이 모두 폐사했고요, 양식장의 굴과 김도 모두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물 가지고 노랑진에 가도 하나도 받아 주질 않아요. 수산물물뿐 아니라 구구마, 쑥 등 밭농사도 전부 계약 취소됐어요. 횃집은 수족관에 있던 고기들이 모두 죽어서 썩고 있고요. 만리포 해수욕장은 4미터 정도까지 기름이 스며 있어요.

태안의 모든 것이 죽고 마비돼 버렸죠. 겨울에는 맨손으로 바지락 캐고 팔아서 먹고살았는데 이젠 그러지 못하죠. 돈이 없으니 난방도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기세를 못 내서 한전에서 곧 단전한다고 합니다.

개학이 다가오는데 등록금도 못 내고 다 휴학하게 생겼어요. 은행 잔고도 바닥 나면 얼어죽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요. 기름 절도도 벌어지고, 방제 작업하러 간 사이에 도둑이 들기도 해요.

검찰이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발표를 했는데요?

정박한 배를 와서 박았는데 쌍방과실이랄까 말이 됩니까? 와서 차를 박으면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됩니까? 검찰 발표는 말도 안 됩니다. 국가와 검찰이 삼성에 놀려 었는 거죠.

언론도 삼성을 피해 가더군요. 삼성 구단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국영방송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삼성 비판하는 문구도 안 나왔고요. 1월 18일 분신하니까 그제야 나오더군요.

쌍방과실은 태안 주민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외국처럼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삼성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국민이 죽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인가요.

검찰 발표 이후 삼성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사과문을 보고는 ‘개 같은 소리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내 자식을 죽여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삼성의 ‘완전 보상·무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태안을 복구하려면 적어도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삼성 순이익이 얼마니까? 그거 일부만 풀어도 해결되잖아요. 보상 책임도 안 지면서 사과라니 말이 안 되죠.

이명박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없앤다는데, 그러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보상받으려면 해수부가 있어야 합니다. 해수부를 없애면 어민들이 죽습니다.

앞으로 투쟁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발표가 민심을 자극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는 분위기에요. 울분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내일[1월 22일] 국회로 차량 1백 대 타고 올라갈 겁니다. 태안 주민이 하나돼 삼성의 중과실을 입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동안 태안에 와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태안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삼성 제품 불매도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은 맨날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다’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태안 주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죠. 태안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터뷰 · 정리 전지윤

새로 나온 소책자

《삼성,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삼성의 부패와 범죄, 그리고 저항 —

개정증보판 / 한류한 외 지음

값 3천 원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호소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을 함께 합시다”

이랜드 투쟁이 해를 넘겼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확인했지만 우리는 아직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이랜드노조는 지난 1월 16일 조합원들에게 15억 3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그것도 임원들이 대출받아 보태고 투쟁 기금을 돌려서 간신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만 원으로 두 달 동안 생계와 생활을 유지할 순 없다. 설날에 10만 원이라도 지급하려고 처음 해보는 재정사업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다.

19일 홈에버 시흥점 집중 집회에는 3백여 명이 참석했는데, 준비했던 타격 투쟁은 사전에 차단돼 실패했다. 오늘도 그냥 가는 것이냐는 조합원들의 불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몇 차례의 집중 투쟁과 전국 동시 투쟁이 계획돼 있지만 이랜드노조와 뉴코아노조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회사의 어용조직인 ‘뉴코아살리기비상대책위’와 ‘홈에버직원비상대책위’는 노사평화선언을 했고, 현 노조집행부를 끌어내리고 어용집행부를 세우려 하고 있다. 회사는 현장을 장악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은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투쟁이지 않은가? 여전히 이랜드노조 3백80명, 뉴코아노조 3백 명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원과 집행부의 자존심과 투쟁 의지는 아직 살아 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보다 등 보이고 도망칠 때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아직 투쟁 대오가 살아 있을 때, 민주노조가 붕괴되기 전에, 민주노총이 직접 투쟁을 지휘하고 나서야 한다.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에 동지들의 강력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거의 매일 투쟁 일정이 잡혀 있고 특히 2월 1일 전국 동시다발 매장 타격 투쟁이 있다. 자세한 일정은 이랜드일반노조 홈페이지(<http://www.elandtu.or.kr>)를 참고하십시오.